"민심은 대통합 주문"

추미애 전 의원 민주세력 대통합 광주 투어

추미애 전 의원〈사진〉은 18일 "민심은 대통합을 주문하고 있으며 분열과 낙오가 없는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광태 광주시장과 면담에서 조속한 대통합과 분열세력의 과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민주당에서 나오는 탈당 시사 발언들은 대통합의 급박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세력의 가치를 외롭게 지켜낸 민주당이 제 3 세력이 됐든, 신설 합당이 됐든 한꺼번에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빠진 대통합이 돼 버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라며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의원은 특히 열린우리당에 대해 "대통합을 위해서는 분열에 책임있는 세력들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법적 해체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해체 선언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당이 국민의 심판이 무서워 해체를 당론으로 결정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기들이 싫다고 버린 집을 아쉬울 때 돌아올 공간이라도 지켜냈으니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의원은 지난 5월 광주 방문 때 '다음에 오면 정식으로 표를 달라 하겠다'고 말한 점을 상기하고 "그동안 어렵게 민주당을 지켜주신 당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민주세력 후보로서 나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며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

17일부터 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추 전 의원은 19일까지 지구당 원과의 간담회와 세미나 등에 참여하며 지역민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민주당 다시 갈리나

대통합파 의원 탈당계 써…박상천 '잡탕식-무조건 대통합' 거부

범여권 대통합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통합민주당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통합파 현역의원들과 광역단체장은 이미 탈당계를 작성, 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반면, 박상천 공동대표는 "잡탕식 대통합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파와 당 지도부 사이에 긴박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지만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분당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잡탕식 통합으로는 대선을 승리로 이끌거나 정치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통합민주당은 잡탕식 대통합 정당, 무조건 대통합 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열린우리당이 통째로 제3지대 신당에 들어가면 우리는 참여하기 어렵다"며 "다만 제3지대 신당이 중도개혁주의 정책노선을 채택하고 열린우리당을 통째로 받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대통합 정당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통합민주당 대통합파는 이미 탈당계를 작성한 상태며 박준영 전남지사가 중국에서 귀국하는 19일 이후 탈당 내용증명을 당에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대통합파는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 및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과 접촉하며 제3지대 대통합 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김효석 의원은 지난 17일 박상천, 김한길 대표와의 접촉을 갖고 통합민주당이 함께 제3지대에 합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한길 공동대표는 김효석 의원에게 격한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당 지도부와 대통합파 사이에 감정의 골도 깊게 패이고 있다.

한편, 대통합파 의원들과 광역단체장이 탈당이 현실화된다면 통합민주당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당장, 구 민주당 출신 전남지역 지역구 7명 가운데 김효석, 신중식, 채일병, 이낙연 의원 등 4명의 현역의원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탈당한다면 지역적 기반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연쇄 탈당이 예견되고 있는데다 중도통합신당 출신 의원들도 제3지대 대통합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당내 내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24일 이전 전격적으로 제3지대 대통합 신당 참여 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며 대통합파 현역의원들도 당내 사정을 감안, 탈당 시점을 20일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범여권 대선 주자들의 경선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경선추진협의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9월 15일부터 국민경선 실시를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후보측 정청래, 손학규측 조정식, 김혁규 후보측 성식경 대리인, 임진택 국민경선규칙 공동단장, 이목희 국민경선모임 공동대표, 한명숙 후보측 황창하, 이해찬 후보측 서갑원, 김두관 후보측 정현태 대리인. /연합뉴스

범여권 9월15일부터 한달간 경선

국경추 경선안 합의…여론조사 비율 등 쟁점은 확정 못해

범여권의 국민경선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경선추진협의회(약칭 국경추)는 오는 9월 15일부터 약 한달간 전국순회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경추는 18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천정배 김혁규 의원,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등 7인이 지난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경추 이목희 공동대표는 "대략 10월 14일께에는 범여권의 대선후보가 선출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합신당 창당 일정과 향후 고려 사항 등이 있을 수 있어 국민경선 종료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선 주자 7인의 합의사항이면서 국경추의 결정이기도 하다"며 "향후 출범할 대통합신당의 당헌.당규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추 경선규칙단장인 이인영 의원은 "컷오프를 여론조사만으로 할지 별도의 경선을 치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통합신당 창준위의 전략적 고려도 반영해 컷오프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추는 국민경선의 선관위 위탁 여부는 대통합신당 창준위에 위탁하기로 했고 모바일 투표 실시 여부 등도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천정배 의원 '호남 대표 개혁후보' 역설

21일까지 광주·전남 민생 투어

천정배 의원은 18일 대선출마 선언 이후 두 번째 지방방문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았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를 방문, 박광태 광주시장 면담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목포, 장흥, 고흥, 순천, 여수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개혁후보임을 역설할 예정이다.

천 의원은 특히 이날 박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더 이상 시간이 없는 만큼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배제하지 않고 한꺼번에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은 19일 오전 10시30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 1만인 지지선언식'에 참석한 뒤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을 시찰하고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서남권기독교평화포럼 초청강연회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그는 20일에는 '전남 1만인 지지 선언식'을 치른 뒤 FTA반대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며 21일에는 여수 등 동부지역을 방문한다.

한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1가구 1정규직'을 실현하겠다"며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혁신중소기업 육성 ▲보육·교육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맞춤형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여성고용률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60%로 높이고 청년 실업률을 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쇠똥 투척 유감

장 필수

경제부 차장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놓고 한 대형마트와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롯데마트가 대형 유통업체로선 처음으로 지난 13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들어가자 한미FTA 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소속 회원 50여명은 이날 롯데마트 광주 상무점 정육코너에 쇠똥을 투척했다. 이 과정에서 이 단체는 상무점장 명의의 '불매각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상무점이 15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서자 다음날 운동본부 회원 30여명이 또다시 상무점을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거칠게 항의했다.

상무점은 "불매각서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으로 각서내용도 본사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팔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운동본부측은 "대형마트가 나서 미국산 쇠고기를 파는 것은 한우농가를 죽이는 행위다"며 판매저지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마찰 속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는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다. 롯데마트는 판매 3일만에 전국에서 20t이 팔렸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첨단점에 입고된 냉장육 200kg이 전량 매진되는 등 예외가 아니었다. 롯데마트는 19일 광주·전남 6개점포에 추가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객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우에 비해 가격이 절반 가량이고 호주산보다도 15~20%가량 싸다. 상무점을 찾은 한 고객은 "꽃갈비살의 경우 100g당 한우가 8천원안팎인데 반해 미국산은 3천950원"이라며 "우리같은 서민들은 한우는 비싸서 엄두도 못내고 돼지고기 대신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다"고 말했다.

이 고객의 말처럼 소비자들이 신토불이(身土不二)를 모르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낼 비싼 한우의 대체재로 미국산 쇠고기를 식탁에 올리는 것이다.

공룡같은 폭식성으로 지방상권을 점령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앞장서 미국산 쇠고기까지 판매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시민단체가 쇠똥으로 억눌린 소비자들의 선택의 몫까지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다음달 9일부터는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일제히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무작정 신토불이를 강요하기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로 한우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우값은 올라도 축산농가의 한숨은 사라지지 않는 유통구조의 왜곡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bungy@kwangju.co.kr